

[성명서]

## 부산시는 부산 난개발의 화룡점정을 찍으러 나섰다

- 동래복산 1구역 난개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동래 복산 1구역, 재개발의 이름으로 난개발의 초시계가 이미 작동되어 부산의 가장 핵심이자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역사문화지구가 무참히 파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금정산 줄기가 뺨어 내려 마지막으로 빛어낸 복지라하여 복산동, 복천동으로 불린 바로 그 현장이다. 이에 복천동 고분군은 가야문화의 얼이 커커이 맏힌 고분을 안고 있고 또 한 한편으로는 임진란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충절의 혼맥이 서려진 동래읍성 터이기도 하다.

동래 복천동고분군은 국가사적, 동래읍성은 부산시지정문화재로 관리되어오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사적과 부산시문화재가 서로 겹고들면서 어깨동무하듯 그렇게 선조들의 얼과 혼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문화유적지다.

복천동고분군과 동래읍성지가 있는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문화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해 부산시와 문화재위원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천동고분군은 국가사적이기에 당연히 문화재청이 철저히 보호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고, 부산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온라인 주민 설명회가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동래 복산 1구역이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초고층아파트를 마구 지어 고분군 일대와 동래읍성의 문화유적을 완전히 파헤치고 파괴하려고 한다. 이는 부산 난개발의 화룡점정을 찍으러 혈안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산의 난개발과 문화유적을 잘 보존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앞장선 결과다. 2001년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가 이지역 난개발 단초를 제공하고, 2018년 1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복산1구역 재개발 중 '7구역'이 빠진 심의자료를 묵인하여 통과시킴으로써 문화재 파괴를 자초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회의를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과정 등 사업 절차 전반의 위법성을 면밀히 살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부산시는 동래복산 난개발을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6월 30일 위원회 개최를 진행한다고 하니 언어도단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을 선다는 말인가. 이곳을 파헤친다면 부산시내 문화재보호구역 개발 사업으로 제대로 남아있는 문화재가 어디 있겠는가?

다시 말하건대 부산시 난개발의 화룡점정을 찍기 위해 소집한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즉각 중단하고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와 부산시 담당부서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다시 고발장을 제출하려 한다. 부산 경찰 역시 엄중하고도 지엄한 역사적 임무를 빈틈없이 처리하여 본래 사명을 다해주도록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북산1구역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1.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1. 부산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래복산 1구역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
1. 부산경찰청은 엄중하고 지엄한 자세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

2021. 06. 23

부산환경회의, 부산시민단체연대